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보전을 생각하며



신원우 |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이사

2007년은 우리 나라 국립공원사에서 의미 있는 한 해이다.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 된지 40년이 되는 해이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게다가 올 1월 1일부터 오랜 논란 끝에 국립공원 입장료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국립공원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요즘 들어 우리 나라 국립공원 정책의 근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도전과 위기상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기관 내에 유일한 국토환경 보전 부처인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여건은 만만치가 않아서 걱정이다.

그 도전과 위기 상황의 실체는 개발 마인드가 강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개발을 명분으로 “남해안 개발 특별법” 부터 시작되어 현재 국회에서 입법중인 “연안개발특별법” 문제와 산림청이 계획하고 있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국가등산로 지정” 개발정책 문제이다.

“연안개발 특별법” 과 같은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개발 관련법 제정은 표심(票心)을 향한 정치하시는 분들의 오랜 관심사라 행정부인 환경부나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서는 그 대처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관련 시민단체와 협조하여 관계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문제

점을 이해시키는 등 최선을 다해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백두대간에 대한 국가 등산로 지정 계획 문제는 좀 다르다. 정부기관인 산림청에서 수립 시행하려 하고 있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국가등산로 지정 개발” 문제는 행정부 내의 문제이므로 정부 부처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생태계 보전과 국립공원 정책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개발보다는 생태계 보전에 무게를 두도록 산림청을 설득하여 대처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본다.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백두대간(684km)과 9개 정맥(2,080km)의 산줄기 주요 능선을 국가등산로로 지정하여 등산로를 조성 개발 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백두대간은 국토의 근간을 이루는 큰 산줄기로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상태 축으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생태계(生態系)의 복고(寶庫)로서 그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이러한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 때문에 정부는 “백두대간 보전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고 각종 보전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아직은 충분치는 않지만 보전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관계기관이 나뉠대로의 보전 대책을 수립 시행중에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20개 국립공원 중에 백두대간과 정맥의 핵심부에 10개의 국립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48개 노선 317km가 백두대간의 마루금과 중복되며 이중 27개 노선 171km는 생태 탐방로로 개방되어 있고 21개 노선 146km는 멸종 위기 종 서식지 외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특별보호구로 지정하여 등산객 등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국립공원은 우리 나라 대표적인 생태계 핵심보호지역으로 자연자원 보전이 국립공원 정책의 중심 가치이며, 제도의 본질이라고 본다. 그동안 일부 산악인들 사이에서 “백두대간 종주”라는 말이 생겨나고 웬만한 등산을 하는 사람은 백두대간을 정복의 목표로 삼는 등 정상 정복형 산행문화의 확산으로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가 상당 부분이 훼손되고 있다. 특히 모집산행과 같은 상업적인 무분별한 이용은 생태계의 심한 훼손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산림청의 “국가등산로 지정계획”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환경단체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가등산로를 지정하면 등산하는 사람들이 백두대간에 집중되어 현재의 상태보다 생태계 파괴가 가중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백두대간은 이용보다는 보전에 신경을 써야하고 이미 훼손된 구간의 복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등산문화가 최근 사람들의 WELL-BEING 붐을 타고 확산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등산 활동을 지원하면서도 자연보전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슬기로운 대책이

요구된다. “국가 등산로 계획을 왜 하필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지정하려 하는가? 백두대간 보호법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발상치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현재 전국의 20개 국립공원에는 256개 1,097km의 법정탐방로가 개설되어 이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은 도립, 군립 공원도 유사하여 등산로, 탐방로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 필요시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핵심생태축의 보전을 도외시한 국가등산로 지정계획은 신중히 접근하여 낭비적이고 중복적인 예산투자나 에너지 투자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국가등산로 지정계획은 백두대간과 국립공원이 지니고 있는 생태, 문화, 역사의 보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백두대간 보호목적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자연공원법” 등의 관련법 목적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국립공원 탐방로는 지난 40년간 공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원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고, 2006년 10월에는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및 정맥상의 탐방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자연생태계 보전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 국립공원내 백두대간 및 정맥 146km를 출입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백두대간과 정맥을 국가 등산로로 지정하여 많은 등산객을 백두대간으로 끌어들이려는 “국가등산로 개발계획”과는 같은 사안을 두고 개발부처와 보전부처간의 인식 차이가 이렇게 큰가? 하는 착잡한 생각이 든다.